

【논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검토:
‘민주주의 법학’의 정향 정련을 위하여*

조우영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 교육연구원), 법학

mirong@gnu.kr

<국문초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과 견주어가며 검토한 다음 거기서 고쳐 바꾸거나 거기에 보태어 채울 만한 점들을 제시한다. 그 요지는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법학’ 및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자주적 통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더 다듬으면 좋겠다는 것과, 남한 사회에 잔존하는 ‘봉건적’ 요소들 및 외국 출신 사람들과 ‘재외동포’ 처우도 문제로 삼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생태주의’와 ‘인도주의’ 및 ‘민중적 당파성’ 표명의 의미와 경중 판단 및 차례 배치를 다시 가다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주제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민주법학, 민주주의 법학

< 차 례 >

- I. 머리말
- II. 잘게 뜯어 따져보기
- III. 굵게 훑어 돌이켜보기
- IV. 맺음말

* 심사위원: 정태욱, 김종서, 엄순영

투고일자: 2022. 10. 10. 심사개시: 2022. 10. 14. 게재확정: 2022. 11. 2.

I. 머리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021년 2월 25일에 “지난 30년의 한계를 반성하고 당면한 사회적 의제에 도전하기로 다짐하면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이하 ‘2020 선언문’이라 함)을 채택하고 안팎으로 공유하였다.¹⁾ 그 선언문은 1989년 1월 5일에 확정해서 채택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이하 ‘발족선언문’이라 함)을 이음과 더불어 갈음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제2차 강령’이라고 일컫고 있다. ‘2020 선언문’과 ‘발족 선언문’ 둘 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정기로 엮어내어 온 학술지 ‘민주법학’의 판형인 신국판으로 각각 3쪽씩을 차지하는 그리 길지 않은 글이며, 그 분량에 담길 만한 문맥 구성 및 추상성과 구체성을 띠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 가입한 지 30년 가까이 된 회원으로서 두 선언문의 큰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그 작성이나 채택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거기에 담긴 ‘강령’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의,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를 느꼈다. 필자 말고도 두 선언문을 어떤 식으로든 더 검토해보고 싶은 사람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안팎에 더 있을 듯하여, 이 글로써 더불어 하기를 청하고자 한다.

검토 거리로서 주된 것은 ‘2020 선언문’이지만, 그것이 ‘발족선언문’을 이어서 갈음한 것인 만큼, 두 선언문을 엮어 오가면서 검토하기로 하겠다. 두 선언문 다 이른바 ‘이론’과 ‘실천’ 양면에 걸친 언술을 섞어서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되도록 그 가운데에서 ‘이론’적인 언술들만 뽑아서 다루겠다. 먼저 잘게 뜯어 곱곰 따져본 다음 크게 돌이켜 굵게 훑어보기로 한다.

II. 잘게 뜯어 따져보기

1. 반성 거리: ‘지난 30년의 한계’

1) 다음의 ‘발족선언문’과 함께, 민주법학 제79호, 370-375쪽 참고.

글머리에 소개한 바 ‘2020 선언문’이 ‘반성’의 대상으로 꼬집은 ‘지난 30년의 한계’는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에 대한 억압과 침탈을 묵인하고 정당화한 자본주의 법학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점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이론의 구축”을 외쳤지만 진보의 다양한 시론과 개혁의 부분적 성취에 자족하였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자본주의 법학’과 ‘과학적 세계관’이다.

1.1. 자본주의 법학

1.1.1. ‘자본주의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자본주의 법학’이라는 말의 뜻은 그냥 대충 ‘자본주의를 뒷받침하거나 감싸고도는 법학’이라고 쳐 두자. 그러면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영문판 위키피디아는 그것을 “생산수단들의 사사로운 소유와 이윤을 위한 그것들의 운용에 기초한 경제 체제”라고 요약하면서 그 주요 특징으로 “자본 축적, 경쟁 시장, 가격 체계, 사유재산, 재산권 인정, 자발적 교환, 임금 노동”을 꼽고 있다.²⁾ 그럴듯하니 그렇다고 쳐 두자. 그런데, 그렇다면, ‘자본주의 법학’은 그 자체로서 자동으로 ‘2020 선언문’이 말하듯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에 대한 억압과 침탈을 묵인하고 정당화”하는 것인가? 또는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서 자동으로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에 대한 억압과 침탈”을 하게 되는 것인가?

꼭 “그 자체로서 자동으로”는 아니겠지만, 또는 아닐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는 ‘현실’에서 ‘예외 없이’ 재산 소유나 소유 재산이 치우쳐 있고 노동 능력과 기회가 고르지 않으며 재산과 노동이 ‘실질적’으로는 ‘억지로 마지못해서’나 ‘기울어진 값’으로 맞바꾸어지는 상황에서 작동하며, 그런 만큼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을 억압하고 침탈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 ‘자본주의 법학’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자동으로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에 대한 억압과 침탈을 묵인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더러 ‘정치적 자유’가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법학’과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

2) <https://en.wikipedia.org/wiki/Capitalism>.

적 결핍이 정치적 부자유로 이어지기 십상이므로, 달리 볼 나위나 까닭은 딱히 없을 듯하다.

1.1.2. ‘자본주의 법학’은 뛰어넘어야만 하는 것인가?

‘자본주의’가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을 억압하고 침탈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감싸고도는 ‘자본주의 법학’은 마땅히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렇기만 한 것인가? 거기에 이른바 ‘순기능’은 없는가?

이 물음은 한 편으로 답이 너무 뻔한 실없는 물음일 것이다. 설마 통 없기야 할까?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그것이 너무도 크고 많다. 그래서 이 물음은 적어도 필자에게는 매우 무겁고 진지하며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것이다.

넌리 돌이켜 보아, ‘자본주의’는 인류가 지구상에서 만들고 돌리고 겪어 왔던 역대의 경제 체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것이었다. 그 순기능과 성공의 내용은 혁신과 성장, 생산력의 발전, 많은 사람들의 부유와 건강 등이다.³⁾ 그렇지만 그 순기능과 성공의 위아래와 앞뒤와 옆구리에 두루 적지 않은 역효과와 실패와 희생이 있었음도 말할 나위가 없다. ‘2020 선언문’이 꼬집은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에 대한 억압과 침탈” 말고도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과 자연환경 파훼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소외를 낳았다.⁴⁾ 그러므로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법학’ 둘 다 ‘통째로’ 던져버리거나 뛰어넘기는 마땅해 보이지 않지만 그 역효과나 희생을 낳는 ‘요소나 측면’은 뛰어넘어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1.1.3. ‘자본주의 법학’을 뛰어넘는 법학은 어떤 것인가?

‘자본주의 법학을 뛰어넘는 법학’이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늠하자면, 자본주의 체제나 그에 대응하는 자본주의 법학 체제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필수적인 것과 우연부가적인 것을 가려서 보

3) 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지음/최완규 옮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시공사, 2012); 한스 로슬링 외/이창신 옮김, 팩트풀니스(김영사, 2019) 참고.

4)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에 대해서 특히,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분노의 숫자: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동녘, 2014) 참고.

아야 할 것이며 순기능이 큰 성공 요인과 역효과나 희생을 낳는 실패 요인을 나누어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들이 각각 그러한 것들인가? 또는 여러 요소들의 성격과 기능은 각각 어떠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당장 여기서 꼼꼼히 찾거나 내놓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앞(1.1.1.)에서 소개한 ‘자본주의’의 주요 개념 요소나 특징들에 대해서 거칠게 가늠해둘 수는 있겠다.

먼저, ‘생산수단들의 사사로운 소유’나 ‘사유재산’이나 ‘재산권 인정’은 구체적 대상(목적물)과 그 용도나 기능이나 작용의 측면에 따라 보장하거나 인정하거나 통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철폐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소비나 향유에 쓰이는 재산에 대한 소유나 그 밖의 일정한 권리들은 말할 나위 없이 굳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생산수단들의 사사로운 소유도 당장 통째로 부정하거나 철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럴 수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라도 그것을 한동안 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가운데 토지나 수역의 사사로운 소유는 생산을 위한 것이든 향유를 위한 것이든, ‘자본주의’에 ‘필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서, 그 ‘양적 한정성’에서 오는 ‘배제 작용’을 막기 위해 강력히 통제하거나 제한해야 할 것이다. 토지나 수역 아닌 ‘자본재’의 사사로운 소유는 일단 보장하되 그 남용이나 역기능을 막아야 할 것이다. 자본재에 대한 사사로운 소유를 ‘함부로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일임은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소련, 몽골, 동유럽, 북한, 베트남, 중국, 쿠바)’의 역사와 현황이 말해 주는 바이다.

다음으로, ‘이윤을 위한 생산’은, 자본주의에 ‘고유’하고도 ‘특유’한 것으로서, 자본주의를 통째로 부정하거나 철폐하지 않을 바에야, 그 순기능을 뒷받침하고 그 역기능을 막아내는 ‘알맞은 선’에서 굳게 보장하고 권장·촉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알맞은 선을 가늠해서 굽고 지키는 일은 ‘정치’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 축적’과 ‘경쟁 시장’과 ‘가격 체계’와 ‘자발적 교환’과 ‘임금 노동’은, 자본주의에 ‘고유’하고 ‘필수적’이지만 ‘특유’하지는 않은 것들로서, 또한 자본주의를 통째로 부정하거나 철폐하지 않을 바에야 알맞게 보존하면서 관리해야 할 것이며, 더러 자본주의를 부정하거나 철

폐하더라도 알맞게 촉진하거나 활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자본 축적’은 이른바 ‘우회 생산’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권장·촉진해야 마땅할 것이로되, 다만 그 수단이나 방식은 알맞게 통제해야 할 것이다. ‘경쟁 시장’이나 ‘가격 체계’나 ‘자발적 교환’은, 이른바 ‘문명사회’에서는 거의 자연적으로 어디엔가 생겨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없애거나 막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런 만큼 알맞게 살려서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임금 노동’ 또한 없애고 말고를 묻고 따질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주면서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데 애써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자본주의 법학을 뛰어넘는 법학’은, 자본주의를 통째로 부정하거나 철폐하려는 법학으로서 ‘규정’되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여러 구성 요소들 및 그 기능과 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좋은’ 것들은 감싸서 복돋우고 ‘나쁜’ 것들은 눌러서 막아내는 법학으로서 ‘추구’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마땅하지 않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느 한 사회를 통째로 다 이루는 무슨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구성체’ 속에서 그 어느 부분이나 측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경제 체제일 따름이기 때문이고, ‘자본주의’를 품는 어느 사회구성체가 그 경제 체제로서 꼭 ‘자본주의’ 하나만을 품으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며, 더러 ‘자본주의 법학’은 자본주의만을 주제로 삼더라도 ‘자본주의 법학을 뛰어넘는 법학’은 그럴 나위도 없고 그래서 마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오늘날 이 남한 사회는, ‘자본주의’를 기본적인 주된 경제 체제(‘지배적 우클라드’?)로 삼으면서도,⁵⁾ 그 경제나 행정 체제 속에 ‘봉건적’이라 할 만한

5) 여기에 쓴 ‘지배적 우클라드’라는 말에 대해서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표현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오히려 이른바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말이므로 그대로 두기로 하고, 그 대신 “우클라드, układ: 경제 제도를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시대의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생산 관계의 여러 가지 유형. 이를테면, 1920년대 초기의 소련에는 사경제적(私經濟的) 자본주의·국가 자본주의·사회주의 등의 여러 우클라드가 있었음.”(https://www.google.com/search?q=우클라드&rlz=1C1YTUH_koKR1018&oq=우클라드&aqs=chrome.69i59.6800j0j7&sourceid=chrome&ic=UTF-8), “우클라드

요소들도 적잖이 품고 있다.⁶⁾ 또, 보기에 따라서는 ‘사회주의적’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도 ‘당연히’ 적지 않게 품고 있다.⁷⁾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서 추구되어야 할 ‘자본주의 법학을 뛰어넘는 법학’은 그런 요소들도 주제로 끌어들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 거기서 끝이 아니다. 과거나 현재에 더해서 ‘미래’의 문제도 당연히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이든 ‘생태주의’이든 또 그 무슨 ‘주의’이든, 아니면 어떤 ‘주의’이든 말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가치나 행동방침 탐구도 마땅히 ‘자본주의 법학을 뛰어넘는 법학’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2. 과학적 세계관

1.2.1. ‘과학적 세계관’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의 ‘자본주의 법학’은 ‘2020 선언문’에 비로소 따옴표 없이 담긴 것인 데 견주어 ‘과학적 세계관’은 ‘발족선언문’에 따옴표를 두르고 담겨 있던 말이다(한 번 나옴). 그 가리켜 뜻하는 바가 과연 어떤 것인지, ‘발족선언문’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앞뒤 문맥과 ‘따옴표에 싸였다는 사실’로부터 짚어볼 수밖에 없겠다.

‘발족선언문’에서 그 말은 ““양심적 비판적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는 흐름과 “기본적으로 상이한 입지점 위에 서 있다.”고 하고서 “남한 사회의 법현실, 법학현실을 ‘해석’하는 데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변혁’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고 한 다음에 나온다. ‘발족선언문’은 그보다 앞서 남한 사회의 ‘법현실’과 ‘법학현실’을 각각 다음과 같이 진

(이슬: уклад/uklad)란, 유물 사관에 대하고, 사회 구성체를 구성하는 복수의 생산 양식(생산 관계) 중, 그 개개의 것을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경제제도 등의 역어가 이용된다.”(http://pidia.selfhow.com/2016/05/blog-post_893.html)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소개해 둔다.

- 6) 변호사나 의사 등 이른바 ‘대인적(對人的) 자격·면허’의 정원 제한, 여러 ‘공익 법인’(넓은 의미)들에 대한 사사로운 지배 허용, 이른바 ‘피라미드식’ 공공 조직에서의 중간 단계 직급(행정 공무원 5급이나 7급, 경찰 간부, 군 장교 등) 최초 임용 따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 7) 여러 이른바 ‘사회보험’, ‘사회복지’, ‘사회보장’ 제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단해 두었다. 먼저, 남한 사회의 ‘법현실’은, 그 제반 법률은 “남한 신식민지 파쇼 체제를 유지하고 근로민중의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남한 반동 부르주아지의 도구 바로 그것”이고, 그 법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법 파괴 행위는 은폐하면서 피지배계급을 ‘법질서’에 충실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으면서 “근로민중의 투쟁의지를 마비시키고 근로민중을 ‘파쇼적 합법성’ 속에 가두는 기능을 한다.”고 진단하였다. 다음으로, 남한 사회의 ‘법학현실’은, 그 법학이 “온갖 ‘이론’으로 신식민지 파쇼체제를 미화하는 한편, 그 재생산을 보장하고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반동적 기능을 주로 행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법의 중립성’을 논하고 학문의 ‘순수성’을 운운하면서 남한의 법현실을 묵인하는 공범의 역할을 하여” 왔으며 그리하여 “남한 근로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법학이 아니라 남한 신식민지 파쇼체제의 보위를 위한 법학이 되고 말았던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발족선언문’에서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는 “‘민주주의 법학운동’이 남한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총체적 변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같은 문맥을 보면, ‘과학적 세계관’은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의 버릇대로 쓰인 말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뜻의 요지는, 세상의 온갖 일들을 분디는 이른바 ‘중립성을 가장하는 허위의식’을 떨쳐낸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당파적) 시각’에서 보아 판단하기일 터이고, ‘발족선언문’의 용어를 따르자면 ‘근로민중’의 시각에서 보아 판단하기일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이 취급 대상(주제)이나 주장 내용 면에서 워낙 방대한 사상 조류인지라 간단한 몇 가닥의 요지로 파악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위와 같은 맥락을 띤 ‘발족선언문’의 서술은 아무래도 특히 그것의 이른바 ‘이데올로기 비판’과 ‘계급의식’을 따르면서 그 점을 강조하려고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2. ‘과학적 세계관’은 따라야만 하는, 또는 따를 만한, 것인가?

‘과학적 세계관’이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것대로인 만큼에서는, 앞(1.1.2.)에서 본 대로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법학’이 통째로 던져버리거나 뛰어넘기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도 통째로 따라야만 한대거나 그 대로 따를 만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 대신 일단, 이즈음에서 ‘과

학적’이라는 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독점욕’을 비판해두고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누구에게 무슨 ‘주의자’라는 딱지를 함부로 붙이지는 말아야겠지만, 대충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일컬어도 될 만한 사람들은 흔히 자기네들의 ‘마르크스주의적’ 인식과 판단만을 가리켜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널리 공유되는 일반적인 말버릇을 어겨 벗어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적’이라는 것은 인식이나 판단을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근거’에 따라서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식이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열어두고 인정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얹’을 다듬고 넓혀감을 뜻한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흔히 ‘계급적 당파성’을 바탕 삼거나 내세우면서 자기네와 다른 인식이나 판단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바대로의 ‘과학적 세계관’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더러 과학적인 부분이나 측면이 있을 수 있을 뿐 통째로 치면 과학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바대로가 아닌 ‘일반적인’ 뜻대로의 ‘과학적 세계관’은 따라야 하거나 따를 만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필자는, 일반적인 뜻대로의 ‘과학적 태도’를 따라 갖추고 그로써, 따를 만한 것이라고 여긴다고 답해두겠다. 필자가 이해해서 따르고자 하는 바대로의 ‘과학적 태도’란 세상의 온갖 일들을 크게 ‘사실(존재)’과 ‘가치(당위)’로 나누어서 전자는 ‘과학적 인식(특히 인과관계 파악)’ 거리로 삼고 후자는 ‘도덕(윤리)적 선택(특히 이해관계 조정)’ 거리로 삼으면서 ‘판단’을 해나가되 전자와 후자의 ‘관계’ 파악에서는 이른바 ‘자연주의’와 ‘도덕주의’ 둘 다를 물리치고 이른바 ‘존재·당위 이원론’을 따르는 태도를 가리켜 일컬음이다.⁸⁾ 이런 태도로 ‘과학적 세계관’을 따른다 함은 ‘사실(존재)’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루고 ‘가치(당위)’ 문제는 ‘도덕(윤리)적’으로 다룸을 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뜻대로의 ‘과학적 세계관’이 따라야 하거나 따를 만한 것인지는 가치(당위) 문제인 만

8) 존재·당위 이원론에 대하여, 심현섭, 법철학 I 제관(법문사, 1986), 177-270쪽, 특히 267-270쪽 참고. 또한, 이런 태도를 취함에서, 구스타브 라드브루흐 저/최종고 역, 법철학 중관(삼영사, 1986), 36-44쪽 참고.

큼, 필자와 마찬가지로 태도로써도, 그에 대해 얼마든지 필자와 다른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널리 말해서, 일반적 의미의 ‘과학적 태도’로써 일반적 의미의 ‘과학적 세계관’을 따른다면, 가치(당위) 문제에 대한 답은 그 일반적 의미의 ‘과학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각자의 ‘도덕(윤리)관’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⁹⁾

다만, 여기서, 과학적 인식의 타당도(정확성)를 높여가는 데에서 도덕(윤리)적 선택이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도덕(윤리)적 선택의 타당도(의도한 효과 달성)를 높이는 데에는 과학적 인식이 좋은 참고 거리로서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따로 짚어 챙겨두어야 하겠다. 바로 그 점이 가치(당위) 문제를 다루는 법학에서 ‘과학적 세계관’을 끌어들이던 까닭에 대응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2. 현실 인식과 판단: ‘당면한 사회적 의제’

2.1. 그 영역과 내용 구조 및 방향이나 초점

‘발족선언문’이 당시 남한의 사회 체제를 ‘신식민지 파쇼체제’로 보면서 그 속의 법과 법학의 상태를 앞(1.2.1.)에서 요약 소개한 바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인 데 견주어, ‘2020 선언문’은 그 사이의 남한 체제를 이른바 ‘87년 체제’로 일컬으면서 그것이 “형식적 민주주의의 외관은 발전시켜 왔지만, ① 국가권력의 반민중적 행태에서는 근본적 개선이 없었다.”고 하고서 그 속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짚는다. 곧, “ ① 반공 이데올로기 등 사상의 제약은 해소되지 않았고, ②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윤 전유와 위험 전가 속에 공동체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③ 경쟁지상주의와 투기자본의 범람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덕목을 파괴하고, ④ 사용자 편의적 ‘노동유연화’가 야기한 폭압적 노동 환경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⑤ 사회안전망의 해체와 혐오와 배제의 확산은 사회적 소수자와 빈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⑥ 폭주하는

9) 그에 견주어, 사실(존재) 문제에 대한 답은, 될 수 있는 만큼 탈가치적이거나 가치중립적인 방식으로, 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구해져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본이 초래한 기후위기는 이제 생물종의 절멸을 예고하고 있다. ⑦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력은 자본의 대리인에 머물러 있으며, ⑧ 주류법학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법의 지배’와 ‘공정’, ‘정의’란 이름으로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원문자 숫자는 필자가 넣음).

이와 같은 서술 내용은 곧 ‘2020 선언문’이 “도전하기로 다짐”한 ‘당면한 사회적 의제’가 어떤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더 간명하게 꼴을 조금 바꾸어 정리하면, ⑩ 국가권력의 반민중적 행태 근본적 개선, ① 반공이데올로기 등 사상 제약 해소, ② 공동체의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윤 전유와 위험 전가 대처, ③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덕목 보전을 위한, 경쟁지상주의와 투기 자본 범람 대처, ④ 폭압적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용자 편의적 ‘노동 유연화’ 대처, ⑤ 사회적 소수자와 빈민의 생존 옹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비 및 혐오와 배제 대처, ⑥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종 보존을 위한, 자본의 폭주 방지, ⑦ 정치권력의 자본에 대한 종속적 결탁 방지, ⑧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주류 법학의 합리화(정당화) 시도 대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제들이 각각 해당·대응하는 사회생활의 영역이나 국면 및 문제의 성격을 짚어보면, ⑩과 ⑦은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의 당파성, ①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그 통제 제도의 당파성, ②는 경제 제도의 당파성, ③은 경제 관념(이데올로기)의 당파성, ④는 노동 제도의 당파성, ⑤는 사회적 소외 문제와 그 처리의 당파성, ⑥은 환경 문제의 당파성과 심각성, ⑧은 국가권력과 그 아래 여러 제도들의 당파성에 부응하는 주류 법학의 당파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2020 선언문’이 들어서 말한 ‘당면한 사회적 의제’는, 남한 사회에 세워져 있는 국가와 그 주요 부문(정치와 경제)의 권력과 제도 및 그로부터의 소외와, 그 모든 것들과 그것들의 종속 기반인 환경과의 관계, 또 그 모든 것들과 법학과의 관계를 두루 아울러, 그 모든 것들에서 작용하는 ‘당파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2. 그 파악과 채택 및 지향의 타당성

‘당면한 사회적 의제’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악하여 그것을 그대로 스스로의 의제로 받아들이면서(“도전하기로 다짐하면서”) 이른바 ‘민중적’ 당파성을 채택하고 지향하는 것은 오늘날 남한 사회에서 수행할 ‘민주법학’이나 ‘민주주의 법학’의 태도와 지향으로서 마땅한가?

필자의 눈에는, 지극히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맨 앞에서와 거의 마지막에서(①과 ⑦)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을 문제 삼은 것은 ‘민주주의(와 법학)’의 본령을 짚은 것으로서, 두말할 나위 없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그에 이어서(①~③) 정치와 경제 방면의 제도 및 이데올로기나 관념을 문제 삼은 것은 국가를 이루어서 해나가는 사회생활의 큰 줄기를 짚은 것으로서, 나무랄 바 딱히 없이 마땅하다.

그 다음으로, 또 이어서(④와 ⑤) 노동 제도와 사회적·경제적 소외를 문제 삼은 것은 오늘날 남한 사회의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정치·경제 체제가 ‘민중의 삶’에 대해 끼치고 있는 구체적 해악들의 핵심과 극단을 짚은 것으로서, 그냥 법학이 아닌 ‘민주(주의) 법학’의 사회적 존재 가치에 비추어 그 구실을 다하고자 해 보이니, 그 값 치르기로 특히 마땅하다.

또 그 다음으로, 다시 이어서(⑥) 환경 문제와 그 핵심 요인을 문제 삼은 것은 널리 인간 사회의 근본적 존속 조건과 그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짚은 것으로서, 자연 속 ‘생각하는 동물’의 정직한 자기 성찰과 슬기로운 처신으로 마땅하다.

다시 그 다음으로, 끝에서(⑧) 이른바 ‘주류법학’의 행태를 문제 삼은 것은 사회 속 자기 돌래의 상황을 짚은 것으로서, 그렇듯 스스로 힘 기울여 겨룰 바를 땃땃스레 밝히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문제를 들어 내세우면서 한결같이 이른바 ‘민중적 당파성’을 띠어 드러낸 것은, 개념이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현실 속에서 추구되거나 작동할 때에는 늘 이른바 ‘당파성’을 ‘매개 변수’로 삼아 띠기 마련이라는 점을 자각적으로 천명한 것으로서, 그 자유로운 ‘민중적’ 선택과 천명 또한 그 땃땃함으로 마땅하다.¹⁰⁾

10) 이 곳 앞뒤를 비롯한 이 글 여기저기에서 ‘당파성’이라는 말을 쓰는 데 대해서

3. 행동 방침: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

3.1. 원칙 천명과 목표 제시

‘발족선언문’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글자 그대로 천명된 바는 없지만, ‘2020 선언문’은 그것을 글자 그대로 “재차 천명”한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민중의 존엄과 자유가 회복된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힌다. 이러한 원칙 천명과 목표 제시는 이 선언문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본 요소로서, 그에 대해 딱히 따지고 들 것은 찾지 못하겠다. 오히려, ‘진정한 국민주권’이 ‘모든 민중의 존엄과 자유’를 바탕으로 함을 특별히 드러내어 말하는 점이 적지 돋보인다고 하겠다.

“심사 논문에서 ‘당파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당파성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인식 혹은 의지의 작용으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중적 당파성을 지고의 가치로 하고, 국가권력의 당파성, 경제 제도의 당파성, 환경 문제의 당파성 등을 타파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파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과학적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때, 논문 저자의 학문적 인식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중적 당파성도 민중을 보편적 인간 일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파성보다는 보편성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파 대 당파의 대립이 아니라 당파성-보편성, 편향성-불편부당성, 억압-저항, 굴종-해방이라는 관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당파성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인식 혹은 의지의 작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치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데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입장들’로 보며(이렇게 설명하면 필자가 그 용어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빌어왔으니 그 용법은 ‘존재-당위 2원론’을 벗어나지 않고 쓰고 있음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 여감), ‘국가권력의 당파성, 경제 제도의 당파성, 환경 문제의 당파성 등을 타파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 체제에서는 그런 영역들에서 이른바 ‘지배계급(자본가나 관료 등)적 당파성’이 관철되고 있는데 그것을 ‘민중적 당파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본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리고, ‘보편성’이나 ‘불편부당성’은 ‘사실 인식’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추구해야 마땅한 것이로되 적어도 ‘계급 사회’나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의 ‘가치 선택’에서는 추구될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으나 추구되기 매우 어려우며 추구하는 것이 꼭 마땅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3.2. 기본적 신념과 ‘민주법학’의 자기 성격 규정 및 행동 방침

위와 같은 원칙 천명과 목표 제시 다음에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세 가지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과 ‘우리의 민주법학’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언명 및 구체적 행동 방향과 지침이 나온다.

3.2.1. ‘우리의 신념’: ‘진정한 민주주의’의 조건들

‘2020 선언문’이 ‘우리의 신념’이라고 한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첫째로, “민중의 정치적 자주성과 대표성, 민중의 생존 보장과 경제 정의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둘째로, “특권과 차별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 지역 분권과 자치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으며”, 셋째로, “한반도와 국제적 평화, 자연과의 공존이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꼴을 조금 바꾸어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첫째, 가능 요건은 민중의 정치적 자주성과 대표성 및 민중의 생존 보장과 경제 정의이고, 둘째, 완성 요건은 특권과 차별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 및 지역 분권과 자치이며, 셋째, 지속 요건은 한반도와 국제적 평화 및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 천명은 조리를 잘 갖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앞에서 행동의 ‘원칙’으로서 ‘민주주의’를 천명하고 그에 따른 ‘목표’로서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내세운 다음 그러한 목표를 띤 ‘민주주의’가 ‘진정’하게 이룩되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따져 밝혔으니, 말의 차례가 반듯하다. 가능 요건과 완성 요건과 지속 요건을 차례대로 말한 것도 그 결이 매끄러우며, 각 요건의 내용도 필자의 눈에는 딱히 더 따지고 들 것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여기서도, 민주주의의 가능 요건으로 경제적 요소까지 들어 말한 것과 그 완성 요건으로 ‘공화주의’적 가치나 요소들을 들어 말한 것 및 그 지속 요건으로 생태(주의)적 요소를 들어 말한 것이 돋보이며, 그 점을 새겨 짚어둘 만하다.

3.2.2. ‘우리의 민주법학’: ‘과학적 법학’, ‘실천적 법학’

‘원칙’과 ‘목표’ 및 그 ‘달성 요건’에 대한 언명에 이어서 ‘민주법학’의 자기 성격 규정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우리의 민주법학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최고 이념과 가치로 삼고 진실에 복무하는 과학적 법

학이며, 현장에 기초한 실천적 법학”이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 “현장에 기초한 실천적 법학”이라는 부분은, 따로 문제 삼을 나위 없는 가치 선택으로 보이기도 하고 되도록 이론적인 언술들만 뽑아서 다루기로 한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난다고 여겨지기도 하므로, 따지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민주주의를 최고 이념과 가치로 삼고 진실에 복무하는 과학적 법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다름 아니라, 앞(1.2., 특히 1.2.2.)에서 따져보았던 ‘과학적 세계관’과 비슷한 문제를 띠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여기 ‘과학적 법학’에서의 ‘과학적’이라는 말은, 처음 ‘발족선언문’의 ‘과학적 세계관’과 달리 따옴표를 두르고 있지 않지만, 더러 그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의 말버릇대로 쓰인 것 아닌가? 자칫 그렇다면, 그것은 앞(1.2.1.)에서 따져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해되며, 그러므로 또한 앞(1.2.2.)에서 말했던 바와 마찬가지로의 조건을 달고서 받아들이기로 하겠다. 곧, 이른바 ‘존재·당위 이원론’을 따르면서 ‘가치(당위)’ 문제를 다루는 데서 ‘사실(당위)’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뜻대로의 ‘과학적 인식’ 태도와 내용을 잘 참고한다는 뜻이라면, 그만큼은 마땅하다고 여기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과학적 법학’은 꼭 “(이러한) 민주주의를 최고 이념과 가치로 삼고 진실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를 최고 이념과 가치로” 삼는다는 부분은 ‘과학적 법학’에 대한 필연적 꾸밈말이라기보다는 ‘2020 선언문’의 가치 선택을 드러낸 말로 보아두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진실에 복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필연적 꾸밈을 겨냥해서 쓰인 말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것이 마땅한가? 과학적 법학은 ‘진실에 복무’해야 하는가? ‘복무’라는 말이 아무래도 거슬린다. 그 뜻이, ‘과학적’이라는 말과 더불어 쓰임으로써, 띠어 보이는 ‘몰입성’과 ‘배타성’이 거슬린다.¹¹⁾ 법학

11) 이러한 서술에 대해서 “진실에 복무하는 과학적 법학”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여전히 마르크스즘 학문관의 배타성과 획일성의 혐의가 있다고 한 것은 2020 선언문에 대한 오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 선언문에는 ‘진실’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문단 끝 부분에 ‘정치적 상황 논리에 얽매어 진실에 대한 단호한 헌신에 소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 ‘민주주의를 최고 이념과 가치로 삼고 진실에 복무하는 과학적 법학’라는 부분입니다. 이들을 연결하여 이해한다면, 2020 선언문에서의 과학과 진실에의 복무는 창립 발족선언문에서 말하는 ‘과학적 세계관’을 오히려 지양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이 ‘과학적’이어야 하고 ‘진실에 복무’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처럼 보여서 거슬린다는 말이다. 가치(당위)를 다루는 법학에서 ‘진실’은 몇몇이 자유 선택해서 바탕 삼고(기초) 좇을(추구) 만한 것이로되, 그리고 그 바탕 삼음과 좇음에 ‘과학’을 뵈 또한 마땅할 것이로되(자유는 필연에 따름?), 거기에 그쳐서는 마땅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가치(당위)의 세계에 스며있거나 끼어들기 마련인 ‘당파성’을, ‘과학’을 빌든 말든, 꾸밈없이 자각하고 자유로이 선택해서 몇몇이 좇아야 마땅해 보인다. 그런데 ‘2020 선언문’이 ‘민중적 당파성’을 골라 좇음은 다른 여러 곳에서 엿보이므로, 여기서 굳이 ‘과학적’이라는 말을 떨쳐버리지 않더라도, 필자로서는 그냥 좀 누그러뜨려서, “진실에 기초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적 법학” 즈음으로 표현해두기를 청하고 싶다.

3.2.3. 행동 방향 네 가지

위와 같은 ‘민주법학’의 자기 성격 규정에 이어서 행동 방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네 가지 언명이 나온다. 그것은 첫째, “기존 법학의 민주적 성취를 계승 발전시킬 것”, 둘째, “체제 법학의 허위의식과 계급편향에는 결연히 맞설 것”, 셋째, “자본주의 법체계에 내재한 폭력성과 반민주성을 명징하게 밝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민중의 권리를 적극 옹호할 것”, 넷째, “자본의 세계화가 야기한 전 지구적 위기를 근원적으로 반성하고 이를 극복할 장기적 법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에 기초하고 진실을 추구하면서 민중적 당파성을 견지·관철하고자 하는 법학’의 행동 방향으로서 모자랄 데는 딱히 없어 보이며, 그래서 이에 대해 딱히 따져들고 싶은 바도 없다.

생각합니다. 저자가 말한바 학문과 과학의 기초인 존재-당위 2원론이 바로 2020 선언문의 학적 기초였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발족선언문의 과학이 이 테올로기에 의해 염색된 것이라면, 2020 선언문은 가치를 지향하되,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위해서도 외면하지 말아하는 진실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심사 의견에서 2020 선언문이 진실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데 견주어, 필자는 2020 선언문이 ‘복무’라는 표현을 씌으로써 진실에 ‘구속’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듯해서 ‘(사실)인식-(가치)선택 2원론’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비평했음을 밝혀두고, 이를 둘러싼 나머지 판단은 여러 독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겠다.

3.2.4. 다섯 가지 ‘결의’: 행동 지침

위와 같은 행동 방향 언명 다음에는 ‘2020 선언문’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다섯 가지의 ‘결의’ 내용이 나온다. 그 가운데 ‘둘째’는 “사회 현실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법이론을 구축”하며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실천적 법학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연구 풍토’에 대한 것이며, ‘넷째’는 활동 방식에 대한 것이고, ‘다섯째’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사회적 구실에 대한 것으로서, 이 글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실천’적인 언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론’적인 문제를 떼는 것으로도 보이는 ‘첫째’만 따져보기로 하겠는데, 그 내용은 “우리는 부와 권세의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과 가치를 옹호할 것이며, 수도권 중심주의를 벗어나 지역의 현안을 의제화하고,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생태주의 관점으로 이행하며,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인도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거기서 필자가 문제 삼아 따져보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이다. 그것이 과연 ‘한반도’에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과학적 법학’의 지향일 수 있는가? ‘2020 선언문’이 채택해서 표명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치들은 그 실현 가능성과 민중적 효용 발휘 가능성을 ‘과학적 사유 방식’을 따라서(도) 긍정할 수 있을 듯하지만, ‘자주’나 ‘통일’, 또는 ‘자주적 통일’은 남북한 각각의 내부 현황과 상호 관계 및 주변 외국들과의 국제 관계를 ‘과학적’으로 참작해서 그 실현 가능성과 민중적 효용 발휘 가능성을 가늠할 경우 과연 긍정적 답이 나올 수 있을지 적잖이 의심스럽다. 이것은 물론 필자의 ‘막연한 감각’에 따른 판단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 ‘자주’란 어떤 무엇인가? 자주와 통일은 ‘평화 속에서’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이루면 좋은 것인가? 좋다면 어떤 점이 어떻게 좋은가? 그 좋은 점이 꼭 자주와 통일 아닌 다른 무엇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인가? 자주와 통일을 이루기만 하면 그 좋은 점은 저절로 얻어지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자주와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그 좋은 점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여러 물음에 대한 답을 ‘과학적’ 현실 인식과 ‘민중적 당파성’을 바탕으로 다시 따져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분단 78년, 그 처음부터 한동안은 ‘자주적 통일’이란 것이 ‘절대적’ 가치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에 와서는 어느덧 ‘관성적 이데

올로기'로 바뀌어 있지 않은지, 따져볼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¹²⁾¹³⁾

III. 굵게 훑어 돌이켜보기

위와 같이 '2020 선언문'이 반성 거리로 삼은 '지난 30년의 한계'와 그 현실 인식을 드러낸 '당면한 사회적 의제' 및 행동 방침으로 내세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의 여러 요소들을 웬만큼 잘게 뜯어 따져보았으므로, 이제는 '2020 선언문' 전반을 '발족선언문'과 견주면서 굵게 훑어 돌이켜볼 차례이다. 먼저 '발족선언문'과의 차이를 살펴본 다음 고치고 채우면 좋을 만한 점들을 짚어보기로 하겠다.

1. '발족선언문'과의 차이

-
- 12) '독일 민족(독일어 사용자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로 나뉘어 사는 게 뭐 그리 나쁠지, 1990년 독일 재통일은 과연 '자주적'이었는지, 예멘 통일은 '민중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 따위를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 13) 이러한 서술에 대해서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가치 자체를 이미 철지난 구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적 평화통일은 통일 이전에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바로 한반도에 상시 드리는 전쟁의 위협을 방지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적이란 표현도 그 동안 한반도에서의 충돌,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이 모두 외세에 의한 침탈이었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한국전쟁도 실질적으로는 중러와 미국의 전쟁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여전히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도 멀게는 화학적 결합, 가깝게는 인적 교류 그리고 그 사이에 경제적 연결 국가연합 등의 점진적이고 다양한 층위가 있을 수 있다고 할 때, 통일의 과정은 우리 항구적 평화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심사 의견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은 통일 이전에 평화를 말하는 것'이며 '자주적'이라는 표현이 기왕의 외세 침탈과 그에 의한 분단을 경계한 것이라고 보는 데 견주어, 필자는 '자주'에 대한 강조가 '평화로운 통일'을 가로막는 요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왕의 외세에 의한 침탈과 분단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 역량이 오늘날에 견주어 한참 모자랄 때 있었던 일이므로 사정 변화를 헤아리지 않는 '관성적' 이해가 판단을 그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와 같이 의문을 제기하였음을 밝혀 둔다. '자주(independence)'보다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y)과 지정학적 한계(주변 열강보다 더 강해지기 어려움)를 고려한 통일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1.1. 기조: 현실 인식과 자기 규정 및 목표 지향

‘2020 선언문’을 ‘발족선언문’과 견주어 볼 때 얼핏 두드러지는 것은 ‘말투’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발족선언문’의 말투는 이른바 ‘1980년대 운동권’에 보였던 자못 ‘마르크스주의적’인 빛깔을 띠었고 좀 흥분된 선동 웅변조였는데, ‘2020 선언문’에 와서는 담담 차분히 반성과 다짐을 서술할 따름이다.¹⁴⁾ 그렇게 바뀐 까닭은 꼭 집어 밝히기 어렵겠지만 두루뭉술 ‘시절이 바뀌어서’라고 해 뒤도 될 테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현실 인식과 자기 규정 및 목표 지향이 달라져서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먼저, 현실 인식은 앞(Ⅱ. 2.1.)에서 본 바대로 남한의 사회 체제를 ‘신식민지 파쇼체제’로 보았던 것에서 “형식적 민주주의의 외관은 발전시켜왔지만, 국가권력의 반민중적 행태에서는 근본적 개선이 없는” ‘1987년 체제’로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자기 규정은 미묘하게 ‘민주주의 법학(운동)’에서 ‘민주법학(민주적 법학 운동)’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목표 지향은 “남한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총체적 변혁에 기여”하면서 “파쇼적 법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중적 법체제를 구축”하여 “근로민중이 법을 자신의 도구로 갖게”하는 것에서 “모든 민중의 존엄과 자유가 회복된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반적으로, 특히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적’ 인식과 지향 면에서, ‘꽤 누그러진 것’이라고 가늠할 수 있겠는데, 이를 두고 꼬집어 잘잘못을 따질 나위는 없어 보인다. 시절이 바뀌어 온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이념 실현의 알짜 매개 변수인 ‘민중적 당파성’만은 놓지 않고 굳건히 붙들고 있으니 말이다(Ⅱ. 2.2. 참고).

1.2. 그 밖의 빼고 녹인 것과 더하고 보탠 것

위와 같은 기조 변화에 맞추어, ‘발족선언문’에서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법이론들을 비판하면서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이론을 구축할

¹⁴⁾ 물음표(?)와 느낌표(!)가 ‘발족선언문’에는 각각 2번과 5번씩 나오는데 ‘2020 선언문’에는 1번도 나오지 않는다.

것”이라고 천명했던 행동 방침이 ‘2020 선언문’에서는 “기존 법학의 민주적 성취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체제 법학의 허위의식과 계급편향에는 결연히 맞서(자본주의법과 그 폭력성을 포장하는 허구적 법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자본주의 법체계에 내재한 폭력성과 반민주성을 명징하게 밝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민중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며 “자본의 세계화가 야기한 전 지구적 위기를 근원적으로 반성하고 이를 극복할 장기적 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밖에 ‘2020 선언문’에서는 시점의 차이에 따라 ‘탈속선언문’에 당연히 없던 여러 ‘당면한 사회적 의제’들이 언급된다(II. 2.1. 참고). 그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대처, 경쟁지상주의와 투기자본 대처, ‘노동유연화’ 대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 대처,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종 보존 등은 특히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2020 선언문’에서 ‘우리의 신념’이라고 말한 것들(II. 3.2.1. 참고) 가운데 ‘지역 분권과 자치’와 ‘한반도와 국제적 평화’ 및 ‘자연과의 공존’도 특히 새로운 것이다. 또한, ‘2020 선언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의’들(II. 3.2.1. 참고) 가운데 ‘수도권 중심주의를 벗어난 지역 현안 의제화’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선 생태주의 관점’ 및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인도주의’도 특히 새로운 것이다.

2. 고치고 채우면 좋을 만한 점들

2.1. 고치면 좋을 만한 점들

‘2020 선언문’의 내용 가운데 고치면 좋겠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점들은 이제까지의 논의 곳곳에서 그때그때 밝힌 바 있다. 여기 다시 한 데 모아 밝혀두자면, 첫째,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법’을 통째로 선불리 부정하거나 폐기하려 들기보다는 그 요소별로(앞에서 따져본 것들 밖에, 그 ‘세계화’에 대해서도) 기능과 작용의 장단점을 따져 대처하자는 것(II. 1.1.2.와 1.1.3.),¹⁵⁾ 둘째, ‘과학’과 ‘법학’의 관계 파악에서 이른바 ‘마르크

15) ‘생태주의’에 비추어, ‘탈탄소 자본주의’의 가능 여부와 효용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스주의’의 관점보다는 일반적인 ‘존재·당위 이원론’을 따르자는 것(Ⅱ. 1.2.2.와 3.2.2.), 셋째,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에 대해서 그 가능성과 득실을 더 찬찬히 따져보고 추구하든지 말든지 하자는 것(Ⅱ. 3.2.4.)이다.

2.2. 채우면 좋을 만한 점들

‘2020 선언문’에 더 보태어서 채우면 좋겠다 싶은 점 가운데 하나도 저 앞의 논의에서 살짝 밝힌 바 있다. 다름 아니라 오늘날 이 남한 사회의 경제나 행정 체제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불건적’ 요소들도 문제로 삼자는 것이다(Ⅱ. 1.1.3.). 그 밖에 또 하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거나 앞으로 들어올 외국 출신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있는 ‘재외 동포’에 대한 마땅한 처우 문제도 챙겨 담으면 좋겠다. ‘2020 선언문’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와 ‘인도주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는 듯이 보여서 하는 말이다.

IV. 맺음말

여기까지 이제껏 글 머리에서 하겠다고 한 일을 웬만큼은 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다시 통틀어 훑어보니, ‘2020 선언문’은 뻑뻑한 냉전과 엄혹한 군사독재의 끝물에 나온 ‘발족선언문’의 때맞춤(시의적절함)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 미심쩍은 민주화 시대에 알맞게 이어받아 이 땅의 ‘민주주의 법학’이 갈 길을 굳건한 ‘민중적 당파성’에 입각해서 잘 밝혀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크게 흠잡을 데는 없겠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필자 나름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간간히 따져보니 위(Ⅲ. 2.)에 적은 바와 같이 다듬고 덧붙이면 좋겠다 싶은 점도 찾아 떠올릴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땅에서 ‘민주주의 법학’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토론하고 더욱 다듬어가면 좋겠다.

글을 맺으려는 마당에 더욱 크게 거듭 돌이켜보니, ‘발족선언문’에서 ‘2020 선언문’에 이르는 30년 남짓 동안 가장 크게 바뀐 상황은 옛 소련

권의 체제 변화와 냉전 해체, 군사독재 종식과 ‘민주화’ 및 지역간 불균형(수도권 집중) 심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기후위기’ 심화 등인 것 같다. ‘2020 선언문’은 바로 위에 적었듯이 ‘발족선언문’의 민중적 당파성을 이어받으면서도 이러한 상황 변화를 알맞게(‘과학적’으로) 참작해서 민주주의 법학이 가야 할 길을 나름 잘 잡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련이 남는 바가 있다. 다름 아니라 ‘2020 선언문’ 막바지 ‘결의’ 가운데 ‘첫째’의 서술 내용 차례를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맨 먼저 “부와 권세의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과 가치를 옹호할 것”이라고 하여 ‘민중적 당파성’ 견지를 표명한 다음, “수도권 중심주의를 벗어나 지역의 현안을 의제화”한다고 하여 어쩌면 우리 사회 체제의 근본적 문제라기보다 그것이 낳은 표면적 결과라고 볼 만한 문제를 짚은 뒤에,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생태주의 관점으로 이행하며,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인도주의를 지향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지구상 인류 사회에서 가장 크고 근원적인 문제는 이른바 ‘기후·생태 위기’이므로, ‘생태주의 관점에서의 이행’을 민주주의 법학이 자리 잡을 가장 넓은 지평으로서 맨 앞에 내세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으로는 ‘세계화’가 우리 남한 사람들이 좀처럼 거스르기 어렵고 모든 인류의 ‘자유’ 실현 범위를 넓히는 면도 띠는 ‘주어진 환경’(법철학에서 말하는 ‘소여’) 가운데 한 요소라고 생각되므로, 그에 서로 맞추어 마땅해 보이는 가치인 ‘인도주의(보편적 휴머니즘)’를 민주주의 법학이 널리 잡아 다질 바탕(이자 궁극 목적 가치)으로서 둘째로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 법학의 정체성(다원주의 속에서의 가치 선택의 자유 행사 방향) 표명으로서 ‘민중적 당파성’을 내세우는 것이 좋겠고, 지역 현안 의제화는 오늘날 남한 사회에서의 특별 관심 주제로서 맨 마지막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¹⁶⁾

16) 이상의 이 글에 대해 “필자의 분석과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 또는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도 같이 제시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함.”이라는 심사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까지 필자가 여기서 감당하는 것은 능력 면에서도 무리이고 역할 분담 면에서도 알맞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민주주의 법학’을 함께 하려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할 일로 미루고자 하니, 양해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구스타브 라트브루흐 저/최종고 역, 법철학 중판, 삼영사, 1986.
- 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지음/최완규 옮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시공사, 2012.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분노의 숫자: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동녘, 2014.
- 심헌섭, 법철학 I 재판, 법문사, 1986.
- 한스 로슬링 외/이창신 옮김, 팩트폴니스, 김영사, 2019.

<Abstract>

Revisiting the ‘2020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for a refined orient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JO, U-yeong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suggests some reconsidered opinion for a more favorable re-orient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in South Korea, after reviewing the ‘2020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in comparison with the ‘Inaugural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The gist of the opinion is that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fine the perspectives on ‘capitalism’, on ‘capitalist legal studies’, on ‘Marxist-oriented viewpoints’, and on the ‘independent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o take issue with the ‘feudal’ elements remaining in South Korean society and with the treatment of people from abroad and ‘overseas Koreans’; and to adjust and rearrange the weight and order of proclaiming ‘ecologism’, ‘humanism’, and ‘popular partisanship’.

Key phrases: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020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Inaugural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emocratic legal studies, orient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